박정희 정권 주도로 우여곡절 끝 통합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③ 출범 이후
② 출범 과정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비구 · 대처 갈등 해소 위해
불교재건위원회 구성 추진
승려 자격기준 쟁점 사안
문교부 강도 높은 중재로
비구승 측 중심으로 출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통합종단 출범의 시발(始發)은 1960년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종교자율 · 비구대처 통합 방침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비구대처간 갈등해결을 위해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종교 내부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비구대처 통합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처승 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비구승 측인 조계종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처승을 승려로 인정할 수 없고, 정화과정에서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과 소송비 청산 등을 종단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문교부는 불교재건위원회 위원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요구했는데, 비구승측 입장에서는 불교정화의 주역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측과 비구 · 대처간 입장조율은 쉽지 않았다.

상당기간 조율한 끝에 불교재건위원회 조례안은 1961년 12월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불교정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의 일괄 취하조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62년 1월 양측은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에 최종합의했고 문교부 주재의 선서문에 서명했다. 당시 위원은 비구승측 원허 스님, 청담 스님, 추담 스님, 경산 스님, 행원 스님과 대처승측 조용명 스님, 안흥덕 스님, 이남채 스님, 박승룡 스님, 황성기 스님으로 구성됐다. 재건위원회가 결성과 함께 1차 위원회가 열렸고, 각 분과 위원장 선출 등 임원진이 확정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 구성과 종헌종법을 제정할 재건비상종회를 구성하고 비구대처 각 15인씩 30명을 선출했는데, 재건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한달만에 비상종회가 개원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

불교재건위원회는 2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종회의장은 비구측 행원 스님이 맡았으며, 부의장은 대처측 조용명 스님이 맡았다. 동수로 구성된 종회였기 때문에 무엇하나 쉽지 않았다. 특히 승려 자격조항과 종회의원 비율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

승려자격은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로 규정됐고, '사실상 사찰에 거주라며 수도교화에 전력하는 자'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 자'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자' 등 기준을 만들어 대처승의 자격도 일부 인정됐다.



1962년 1월 22일 불교재건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문교부에 모인 비구 · 대처 양측 대표 모습. 사진출처=한국불교100년

종회의원 비율은 비구승 32명, 대처승 18명으로 확정됐다. 비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요인은 당시 박정희 최고의장이 비구승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종헌의 무게중심이 비구승측에 쏠린 까닭에 대처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간 대립각이 심화되자 정부는 세부사항을 문교부에 일임하는 조건으로 종헌을 통과시켰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나 승려의 자격이었다.

비구승측의 주장과 문교부의 방침대로 출가독신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처승의 상당수가 포교사나 주지서리 정도로 전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승 측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3월 6일 대처승측이 불참한 가운데 종헌이 최종 통과됐다. 대처승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종헌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결국 비상종회는 해체됐다. 비구대처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종단을 출범시키려는 정부측 의지는 강경했다.

비구대처측 각 5인을 선출해 정부측 인사 5인을 포함한 15인 비상종회가 다시 구성됐다. 기존 비상종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종회가 종헌을 제정하고 공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에 불과했다.

정부는 새로운 종헌에 근거해 승려자격을 독신출가자에 한정하는 중재안을 통과시켰고, 4월 1일 제9차 재건비상종회에서 통합종단의 기틀을 구성했다. 종정에 효봉 스님이 추대됐으며 총무원장에는 임석진 스님이 선출됐다.

그리고 1962년 4월 11일 조계사에서 통합종단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4월 12일자 '불교분쟁의 해결을 환영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만 7년에 걸친 불교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빙탄불상(氷炭不相)의 대립을 지속하던 비구 · 대처 양승단이 과거의 모든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이제 혼연일치의 통합을 보게 된 과면에는 당사자들의 꾸준한 수습노력과 정부의 조정과 알선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종단은 양측 사무를 인계하고 4월 14일 25개 교구본사를 구성, 문교부 등록을 완료했다.

"총무원 문화부, '문화원' 독립 · 격상 필요"

조계종 문화부, 7월 5일 역대 문화부장 정책간담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를 별도의 '중앙불교문화원'으로 독립 ·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공)는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역대 문화부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의 의견을 정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문화부장 성공 스님을 비롯해 현법 · 혜일 · 성정 · 수경 · 진명 스님 등 역대 문화부장 스님과 문화특보 정현 스님이 참석했다.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은 문화부 조직이 포교원, 교육원과 같이 문화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법 스님은 "중봉 성파 종정 예하께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종단 내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하셨다"고 강조했다.

문화특보 정현 스님은 "문화부의 사업 규모에 비해 예산도 적고 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향후 추진할 종책사업 계획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성공 스님은 "가을부터 연말에 열리는 언론 · 출판 · 음악 등의 시상식과 미술전 등을 한데로 묶어 '불교문화대전'을 신설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문화재관람료 중 3%를 성보환수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낙성 앞둔 광제사에 마지막 원력 결집

7월 5일 기금 전달 잇따라

세종 광제사의 8월 9일 낙성식을 앞두고 수도권 주요사찰들이 신도시 포교원력을 담아 마지막 불사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7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광제사 건립불사 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도 원행 스님에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광제사 낙성식에 화계사 대중들도 참석,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도선사 태원 스님도 광제사 건립기금 5000만 원을 쾌척했다.<사진> 태원 스님은 "마무리 과정에 있는 광제사 건립에 신도들과 동참하기 위해 기금을 십시일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이 2000만 원을 전달하며 광제사 불사에 적극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제사는 종단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자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공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광주시, 나눔의집 지원금 보류…대안 마련 시급

경기도 감사따라 지원 결정키로
"할머니 보호 중단하란 말이냐"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지원과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나눔의집에 대한 3분기 지원을 보류했다. 나눔의집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조례 개정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7월 5일 나눔의집에 2022년 3분기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8200만 원에 대한 미교부를 통보했다. 시는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4월 20일 접수한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불법지원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6월 20일부터 감사에 들어갔으며 7월 8일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민 235명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감사 청구서에서 "조계종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광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 폐쇄 및 독립 법인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현재 나눔의집이 무료노인양로시설로 지정돼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 무료노인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10명 이상이 거주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95년에 설립된 나눔의집은 한때 1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했지만 고령으로 사망, 현재는 4명만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기준을 맞추려 일반 저소득층 할머니들을 입소시키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된다"면서 "게다가 입소 어르신들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특별법에 의해 보고받고 있는 상태로, 요양시설의 법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및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눔의집은 7월 6일, 광주시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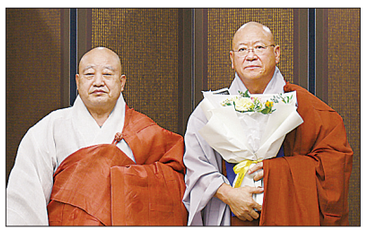
인도 분황사 주지에 본원 스님 임명

원행 스님, 7월 7일 임명장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의 초대 주지로 현지 건립불사를 지휘한 본원 스님(붓다팔라 스님)이 임명됐다.<사진 오른쪽>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본원 스님에게 분황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고 "분황사를 잘 운영하면서 한국 성지순례자들을 잘 살피고 수행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본원 스님은 "한국불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소임을 다해, 2~3년 후에는 분황사가 부다가야의 중심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원 스님은 "내년 1월 세계 수행자들을 분황사로 초청, 불교 수행과 불법을 알리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본원 스님은 성원 스님을 은사로 1977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인도 현지 법인인 물라싼가를 창건, 교육 및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봉 대한불교관음종 제9세 종정 추대법회 및 총무원장 취임식 행

불기2566(2022)년 7월 14일 종로구 낙산 묘각사에서 대한불교관음종이
영산 홍파스님을 제9세 종정으로 추대하고, 청산 법명스님이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합니다.

한국불교의 중견 종단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생방송 중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어에 "btn 불교tv"로 검색해 보세요

일시 : 불기2566(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총본산 낙산묘각사


총무원장 청산 법명스님


종정 영산 홍파스님

대한불교관음종 제9세 종정 추대법회 및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위원회 합장